"늘어나는 학교폭력, 꼼짝마!" 학폭 전문 담당 변호사 배치

폭력사건 이의제기·소송 증가세

서울 모든 교육지원청 배치키로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서울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가 배치된다. 폭력사건에 대한 이의제기와 소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를 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과 자문은 물론 소송 수행과 학생인권과 교권보호에 관한 법률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각 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채용 공고를 내고 2월 말까지 변호사 채용을 완료하고 새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한 이의신청과 분쟁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학생인권 보장과 교권 보호를 둘러싼 요구도 커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했다.

실제로 각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는 지난 2013년 2961건, 2014년 3182건, 2015년 3358건, 2016년 3886건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자체 심의에 불복해 재심을 요구한 건수는 158건이었고, 행정심판은 146건이었다. 학교폭력이 소송으로 커진 경우도 지난 2014년 8건에서 작년에 35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변호사들을 배치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한편, 다양한 갈등에 대한 초기 대응과 사안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와 교사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

사회적 기업 창업 과정 수업. /서울시

'인생 2막을 위해…' 중·장년 교육과정 개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전문인력 양성·경력인턴 참가자 모집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양성' '장년인재서포터즈' 교육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1학기에 개설되는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양성은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과 세상'이 협업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경영실무, 사회적기업 탐방 과정으로 진행된다.

장년인재서포터즈 과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세대융합창업캠퍼스 위탁기관인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가 함께한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교육 후 인턴십박람회 행사, 인턴십 매칭 등을 통해 경력인턴으로서 사회적기업, 청년스타트업 등의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게 된다. 이후 인턴 워크숍과 보수교육 등도 받게 된다.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양성 과정은 기술과 경험을 갖춘 50+세대 전문인력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을 연결한다. 사회적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중장년에게도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대상은 기업 경영 경력이 3년 이상인 퇴직(예정)자다. 전체 과정은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 인턴십 박람회를 통한 매칭, 직업체험(인턴십), 전문인력 지원사업 연계(고용) 순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전문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수도권 소재 사회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턴십과 채용 과정을 연계할 계획이다. 신청 마감은 장년인재서포터즈의 경우 23일까지,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3월 9일까지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13일 오후 2시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모두의 강당에서 교육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범종 기자 joker@

"서울시 청소년 정책, 내가 직접 만들어요"

'어린이·청소년 참여委' 위원 모집

서울시는 청소년 정책 수립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23일까지 모집하는 위원은 서울시 청소년 정책을 자문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참여위원회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9세 이상 24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연임·중임 위원은 해당 청소년참여위원회 전체 위원의 10%내외로 구성된다.

참여위원회에 지원하고려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시 누리집에서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정책제안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sysc0404@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기관과 학교의 추천을 받는 경우에는 추천서와 자기소개, 정책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방법은 공개 모집이 원칙이다. 기회균등과 소수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추천을 병행한다. /이범종 기자

'내신 부풀리기 논란' 2라운드

교육부

공동교육과정 감독 강화로 예방

교육계

전형방식 다양해 악용 초래 가능

올해 3월 새 학기부터 적용되는 중·고등학교 학생부 석차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학생부 성적을 부풀리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교육부가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대학의 전형방식을 일일히 간섭하지 않는 이상 학생부 부풀리기를 막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본지 2월 1일자 19면 참조〉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망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을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개설해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학교 간 통합 선택 교과)의 수강인원에 관계없이 석차등급을 표기하지 않도록 했고,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신설되는 진로선택과목과 과학탐구실험, 실습형·과제중심 과목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3단계(A~C)로 느슨하게 하기로 했다.

특히 석차 등급을 매기지 않는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학업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크고, 해당 교과목이 확대될 경우 상대적으로 타 교과목의 학생부 석차 등급의 평균 등급이 상승하는 효과로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 이를 악용한 공동교육과정의 무분별한 개설이 우려된다.

교육부. /연합뉴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지난 1일 "시도교육청에서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가능한 과목은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대입 학생부 교과전형의 경우 석차등급이 없는 경우 전형요소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성적 유불리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각 시도별 공동교육과정 개설·운영 기준이 달라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를테면 서울지역에서 개설이 가능하지만, 경기지역에서 개설이 불가능한 공동교육과정이 가능하다. 일선 고교나 각 교육청이 자신의 학교나 지역 고교의 학생부 등급을 올리기 위한 시도 또한 가능하다. 이 때문에 공동교육과정에 관한 공통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학생부 교과전형의 경우 대다수 대학들이 석차등급이 없는 교과목은 전형요소로 활용하지 않지만, 석차등급이 없는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타 교과목의 학생부 평균 등급을 올리는 게 가능해 내신 부풀리기 우려는 여전하다는 것이 교육계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모 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교육부가 개별 대학들의 전형방식을 일일히 간섭하지 않는 이상 학생부 성적을 부풀리려는 시도를 막지 못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학생부와 관련한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진로선택과목 등 성취도 평가 단계를 기존 5단계(A~E)에서 3단계(A~C)로 줄여 변별력을 약화시키는 내용 또한 대학별 성취도 평가에 대한 반영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학생부의 변별력 논란만 부축일 가능성이 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韓 '개천서 용나기' 어려워져… 학업탄력성 9위 급락

공부 잘하는 '흙수저' 크게 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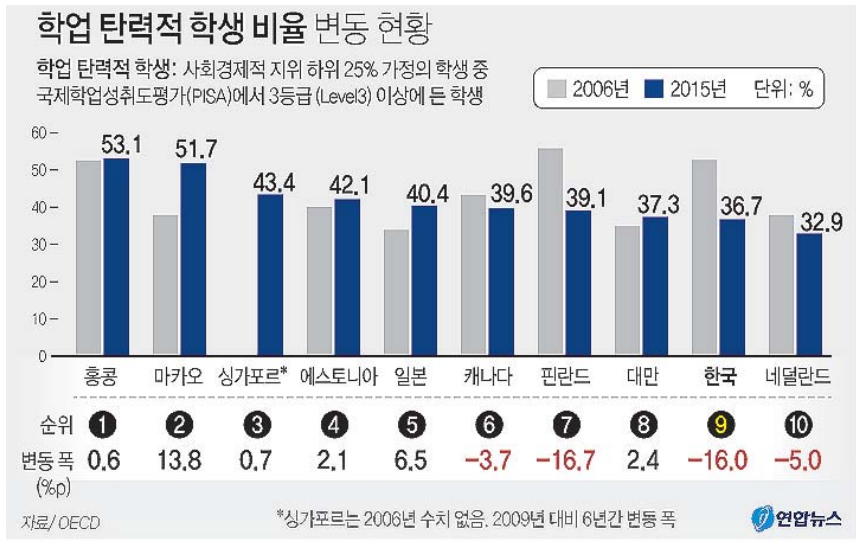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서 하위권

교육 통한 계층 상승 사라질 수도

한국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른바 '흙수저' 학생 중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의 비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가난해도 교육을 통해 계층 상승하는 것이 예전보다 어려워진 셈이다.

지난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위 25%인 한국 가정의 학생 중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에서 3등급(Level3) 이상 상위권에 든 '학업 탄력적' 학생 비율이 2015년 36.7%로 70개 조사대상 국가 중 9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지난 2006년 조사에서 이 비율이 52.7%에서 9년 만에 16%p 급락한 것으로 같은 기간 하락폭이 16.7%p로 나타난 핀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학업 탄력적 비율 상위 10개국 가운데 비율이 낮아진 나라는 한국과 핀란드를 비롯해 네덜란드(-16.0%p), 캐나다(-3.7%p) 등 4개국이었다.



학업 탄력적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53.1%를 기록한 홍콩으로 2006년(52.5%)보다 0.6%p 상승했다. 이어 마카오는 13.8%p 상승한 51.7%를 기록해 2위를 차지했고,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일본 등이 상위 5위권을 형성했다.

이밖에 주요 경제국 중 독일(32.3%)이 12위, 영국(28.2%)은 19위, 중국(25.9%)은 22위, 프랑스(24.1%) 28위, 미국(22.3%) 31위 등으로 조사됐다.

OECD에 따르면, 학업 탄력적 학생 비율이 상승한 국가들은 평균 학업 성취 수준을 높이고 학교 교육 질을 개선하거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능력을 설명하는 정도를 줄여 형평성을 높임으로써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는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수학·과학 성취도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한국은 지난 2009년 51.3%로 3위로 밀렸다가 2012년 54.9%로 2위로 복귀했지만, 2015년 30%대로 급락해 학업성취도도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다. /한용수 기자

3월 개학전, 전국 교육시설물 대진단 나선다

3월 개학을 앞두고 전국 유치원과 대학 등 교육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진단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전국 8만5000여개 교육기관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안전대진단에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건물과 해빙기 취약시설인 축대·옹벽, 대학실험실, 학교 내 어린이 놀이시설 등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시설물을 점검하고,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민관합동점검이 진행된다. 특히 기숙사와 합숙소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특별 소방점검과 함께 야간화재 대피훈련도 진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안전대진단에 차관을 단장, 교육안전정보국장을 부단장으로 임명하고, 각 소관 부서별로 6개팀으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속기관 직원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직접 점검하고, 전문기관의 정밀점검으로 안전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용수 기자